

“편파적 진행” 정경심 재판부에 檢 집단반발

法 “중립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했지만 검찰 불만 표출

열람·등사로 검·변도 충돌 “보석염두 지연” vs “호도부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검찰은 지난 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초판에 “예단이라든지 중립성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이 돌아가며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계속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검찰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냐.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맞섰다.

이러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이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우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또 반발했다.

한 검사는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변호인에게도 실물 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했다. 이걸 명백히 허위다.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안 듣

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 읽어왔다. 앉으시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사들은 돌아가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나갔다. 반박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기도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서는 “단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다시 “편파적 진행”이라고 또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부분까지 적시해줬다”며 “편파적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는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변호인은 “등사 관련 개인정보 삭제 등 이중, 삼중 업무를 진행하며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저희쪽 잘못으로 등사가 늦어지게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에 검찰은 “변호사 측에서 직원 2명을 보내 열람등사를 하고 있다. 직원을 총원하거나 일찍 나와달라고 여러 번 말해도 계속 2명을 보내거나 1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제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마 재판장께서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연관 지으신 것을 발미로 이를 (보석신청에) 추후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일부러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 삭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상호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열람 등사 지연을 마치 변호사 사무실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와 검찰의 마찰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30년 재판했지

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순 있지만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그런데 검사들 한 분 예의없이 재판장 발언을 제재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처음 열린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임시부정 등 혐의의 공판준비기일도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변호인은 추후 기일에 혐의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임시부정 혐의 중 임시부정 혐의를 먼저 심리하자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



‘남도학속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이 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남도학속은 피해자에 공개사과하라”

시민사회단체가 남도학속과 광주시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도학속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지모임’은 18일 성명을 내고 “남도학속과 광주시는 피해자가 5년 동안 고문 속에 머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공동이사장인 남도학속은 서울에 거주하는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장학지원을 위해 남도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지지모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남도학속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2심 판결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성희롱 행위자와 남도학속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지모임은 “이번 판결로 성희롱 피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남도학속의 책임이 정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사 2심에서 공동배상 판결이 나온 남도학속은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한지 1년만인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해당 직원의 요양승인처분 취소 건에 관해 소를 취하했다.

지지모임은 “이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2015년부터 5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결과물”이라며 “행정소송은 취하했지만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남도학속은 민사 2심 판결에 승복하고 진행 중인 상고를 즉각 취하하라”고 말했다. 뉴스

해산 5년 통합진보당 대책위 “현재 재심하라”

명예회복 사건백서 발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심,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원상 회복조치를 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5주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재심추진을 위해 전국민적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위’를 발족하여 사건백서 발간과 재심 추진을 토대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에 나선다

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숨겨진 목적’이 있으니 해산해야 한다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법원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초법적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음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로 밝혀졌다”며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라면 이제라도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독립 영웅을 기립니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매한 윤봉길 의사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최혜원 윤봉길합 무장관 등 승조원들이 헌화를 마친 후 거수경례하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료발견, 자태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일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